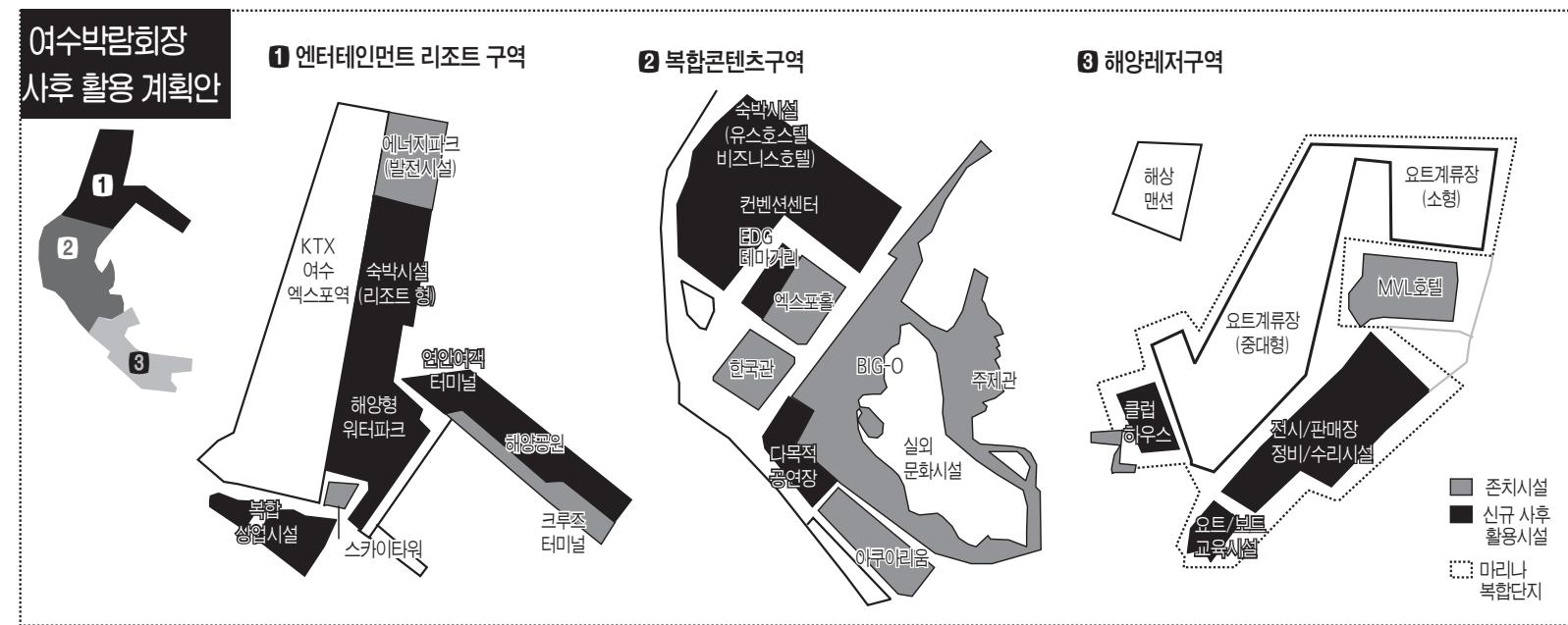


지방자치·종합



주제관 포함 박람회 부지·시설 2년내 매각

■ 정부 확정 여수박람회 사후 활용 방안

엔터테인먼트 리조트·복합콘텐츠 등 3구역 개발

정부가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계획을 확정함에 따라 부지 매각과 개발 등 사후활용 작업도 탄력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박람회장의 기업관(7개), 어린이극장, 국제기구관, 자체관, 부제관(3개)은 철거되며 주제관, 한국관, 빅오, 국제관(EDG 포함), 스카이타워는 영구 보존된다.

한국관·엑스포홀 등 공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시설은 제외하고 주제관을 포함한 95% 가량의 박람회 부지·시설은 2년 내 매각하게 된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지 매각이

힘들 경우에는 구역별 매각을 추진하게 되고, 빅오와 엑스포디자일갤러리(EDG)는 민간 전문 운영업체에 위탁·관리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박람회장은 크게 엔터테인먼트 리조트구역, 복합콘텐츠구역, 해양레저구역으로 나눠 개발된다.

엔터테인먼트 리조트 구역은 KTX 역사 주변에 푸드코트, 기념품점 등이 들어서는 복합상업시설, 워터파크 실내 스키스쿠버과 실내 스파장을 갖춘 해양형워터파크 등이 조성된다.

빅오와 연계한 문화공간을 쓰고, 테마파크는 엑스포디자일갤러리(EDG)와 묶어 운영한다.

해양레저구역은 엘호텔 일대 해상과 주위 공간으로 호텔과 마리나 등이 입지해 휴식, 안정, 치유, 미용, 웨딩 등을 테마로 개발된다. 요트계

류장, 마리나 교육시설, 요트 판매·정비·수리시설 등을 구비하게 된다. 요트를 정박할 수 있고, 관련 교육과 상품을 전시·판매하는 시설도 들어서게 된다.

빅람회 종사자들의 숙박시설로 사용했던 엑스포타운은 민간에 분양되고, 임대한 6곳의 환승주차장(153㎡)은

도 반환하게 된다.

또 한국관 일부를 활용해 박람회 각종 기록과 해설 전시물, 참가국 기념품 등으로 전시하는 여수엑스포 기념관을 조성하고 해양과학관도 운영한다. 한국관·엑스포홀 등 컨벤션 기능을 활용해 기후변화·여수선언 등 관련 국제회의 등도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 사업자 공모와 제안서 접수를 시작해 12월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부지 매각과 원활한 사후활용을 위해 정부지원위원회(위원장 총리)와 실무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운영해 민간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오피니언기자 kroh@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 사후활용 지역 반응

“정부 지원 의지 담겼다” 道·국회의원

“직접적 지원 약속 없다” 시민단체

정부가 5일 발표한 ‘여수박람회 사후활용 계획’과 관련 지역 국회의원과 전남도 등은 “정부의 지속적 관심이 담겨있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반면, 여수지역 일부 시민단체 등은 “직접적 지원 약속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김성곤(여수갑·주승용)(여수을)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의 사후활용이 희망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들 의원은 “사후활용 기구를 특별법상의 기구 출범, 해양과학관 운영, 여수프로젝트를 위한 정부의

충분한 재원 조성,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해양특구 지정, 세제혜택·개발부담금 감면·매각조건 완화 등 인센티브 부여는 아주 의미 있는 성과”라고 강조했다.

전남도 한 관계자는 “정부 선우 자금을 분할 상환할 수 있고, 부지 매각이 힘들 경우 자산관리공사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점은 정부가 일정 정도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다”면서 “특별법상 법인도 정부의 지

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부지를 팔아 정부 선우 자금부터 갚고, 운행비도 충당하라”는 사후활용 계획의 큰 틀에 대한 반감은 여전하다. 부지를 사겠다는 기업이 없을 경우 장기적으로 사후활용이 표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수엑스포시민포럼 류중구 대표위원장은 “박람회 부지·시설은 일방적으로 95% 가량 매각한다는 것은 정부가 막대한 투자를 해놓고 그 시설을 폐허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우선 투자를 해줘야 하고, 이를 위해 여수 등지의 남해안 10개 시·군 사회단체와 논의해 항의 집회 등을 열겠다”고 말했다.

/오피니언기자 kroh@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임문택기자 mtlim@

지방의회 내년 의정비 잇단 동결

구례·해남·장성 이어 광주시의회도 검토

태풍 피해 등 사회적 분위기 의식

광주·전남 상당수 지방의회가 내년도 의정비를 잇따라 동결했다. 태풍 피해로 지역민들이 고통을 받는 여건 등을 의식해 의정비를 동결해야 한다는 게 전반적인 분위기여서 나머지 지방의회들도 동참할 지 주목된다.

구례군의회는 최근 의원 단체회를 열어 어려운 경제 여건과 군의 재정 등을 고려해 내년 의정비는 지난해 2.2% 인상한 바 있어 내년도 의정비를 인상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분위기다.

해남군의회도 태풍 피해와 경기침체가 지속하는 가운데 군민과 아픔을

도 의정비를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으나 태풍 피해가 극심하다는 점을 감안해 동결 의견이 우세한 상황이다.

광주지역 5개 자치구와 여수, 순천, 광양, 곡성, 영광, 보성 등 나머지 자치단체도 조만간 의정비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동결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광주시의회의 한 관계자는 “태풍으로 피해를 본 주민이 많아 고통분담 차원에서 의정비를 인상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의원들 사이에서도 동결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남도청·도의회 면적 법정기준 초과

전국 16개 지자체 불법 ‘과대청사’ 유지

전남도청과 전남도의회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건물 중 6.5% 가량이 아직도 법정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유예기간이 끝난 지 1년이 넘은 만큼, 이들은 불법으로 과대청사를 유지한 셈이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44개 지자체 본청 청사 중 16곳, 의회 청사 중 14곳, 단체장 집무실 6곳이 아직도 법정기준을 맞추지 못했다.

행안부는 지난 2010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령을 개정해 자치단체 유형과 인구규모 등에 따라 청사면적을

정하고 지난해 8월까지 1년간 유예기간을 뒀지만 지자체들이 초과면적을 줄이도록 했다. 지자체들이 무리해 과대청사를 지으면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됐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하지만 현재 대전시청사는 4만 8216㎡로 여전히 기준면적(3만7563㎡)을 1만㎡ 이상 웃돌았다. 시의회 청사도 8765㎡로 기준면적 5174㎡를 3000㎡ 이상 넘겼다.

전북도는 청사면적이 기준면적(3만9089㎡)을 4570㎡ 초과한다. 도의회 청물도 기준면적(9878㎡)에 맞게 줄이지 못해 2000㎡를 더 줄여야 한

다.

전남도는 청사면적이 기준면적(3만9089㎡)을 7526㎡, 도의회는 기준면적(9878㎡)을 3000㎡ 초과한다.

지방의회 청사는 인천광역시, 부산 동구·기장군·영도구, 대구 달성군, 전북 임실군, 광양시 등이 기준면적을 초과했다.

행안부는 초과면적을 줄이지 못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교부세를 산정할 때 불이익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청사 몸집 줄이기로 유도할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강운태 시장, 기아차 갈등 해결 촉구

강운태 광주시장은 5일 오후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을 방문, 김종웅 공장장과 박병규 지회장 등 노사 관계자들을 한자리에서 만나 노사갈등의 원만한 해결 촉구했다.

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이 지역 경제와 자동차산업의 대표기업으로써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지역민의 경제적 피해 및 상실감을 강조하고 조속히 교섭을 마무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기아자동차 노사 양측은 강 시장의 협상타결 요청에 대해 “원만한 합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 타결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기아자동차 노사는 그동안 최대 쟁점인 밤샘노동

폐지를 위한 ‘주간 연속2교대제’ 등 근무형태 변경,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생산량 만회, 임금보전 등 주요사항에 대해 “원만한 합의를 찾지 못하고 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부동산 경매,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광주광역시 동구 지신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범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금주의 총천 물건 대표이사 010-7570-7525

부동산 자산매각 대표이사 010-7570-7525

부동산 경매,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광주광역시 동구 지신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범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금주의 총천 물건 대표이사 010-7570-7525

부동산 자산매각 대표이사 010-7570-7525

부동산 경매,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광주광역시 동구 지신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범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금주의 총천 물건 대표이사 010-7570-7525

부동산 자산매각 대표이사 010-7570-7525

부동산 경매,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광주광역시 동구 지신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범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금주의 총천 물건 대표이사 010-7570-7525

부동산 자산매각 대표이사 010-7570-7525

부동산 경매,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광주광역시 동구 지신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범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금주의 총천 물건 대표이사 010-7570-7525

부동산 자산매각 대표이사 010-7570-7525

부동산 경매,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광주광역시 동구 지신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범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금주의 총천 물건 대표이사 010-7570-7525

</